창사 63 주년에 부쳐

지역 역량 결집해 새로운 호남 열어갈 터

지역 언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해 온 광주일보가 오늘 창사 63주년을 맞았다. 1952년 광주일보는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를 밝히며 세상에 태어났다. 호남 대표지로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광주일보의 63년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헤쳐 온 지난 세월이 그만큼 힘들고, 험난했던 탓이다.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숱한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꿋꿋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다.

광주일보는 창사를 맞아 지역 대표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10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 안위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강경책으로 일관해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왜곡, 독도 도발 등 만행을 서슴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이요, 국민의 의식도 변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고위층 가운데 책임 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진상 규명마저 요원하다. 1주기가 지났건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멈춰 서 있고, 특별법 시행령안은 정부가 조사에 관여할 소지가 다분해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퇴행적인 정치 행태는 갈 길 바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열흘 전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구태에 비추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만성화된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고물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내외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까지 낮춰 과거 일본의 저성장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답답하고, 착잡한 심경뿐이다. 호남 차별 인사는 도를 넘어섰고, 예산 홀대는 이미 굳어진 지 오래다. 인구마저 충청권에 밀리고,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그들은 호남이 그렇게 소외를 당해도 계파 싸움과 기득권 안주에만 혈안이었다. 이번 4·29 광주 서구을 재보궐선거를 두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표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동교동계가 나서면서 여론이 달라질 소지는 있으나 진정성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은 이명박 정권 이후 '잃어버린 7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푸념과 냉소로 일관하며 주저앉을 수는 없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에겐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대거 입주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호남고속철도 서울~광주 송정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오는 9월이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된다. 우리가 역량을 결집한다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문화·예술분야의 흡입 등 그 효과를 배가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 북한선수단은 물론 응원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전 세계인의 주목과 함께 성공 개최가 확실시된다.

이제 광주일보는 창사 63년을 맞아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이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현안 해결 등 언론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우리는 지금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직시, 광주일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명예를 지킬 것이다.

오늘 지령 19974호를 펴낸 광주일보는 불철주야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63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것을 재삼 약속드린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배전의 충고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서구을 잡아라" 여야 지도부 광주 총출동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휴일

새정치 문재인·새누리 김무성 대표 풍암동·염주사거리 등 지원유세

무소속 천정배 "호남 일당 독점 타파"…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가세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본격적인 세몰이를 했다. 여야 후보들은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관련기사 8면〉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무소속 등 5명의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풍암동 풍금사거리와 풍암호수공원, 염주사거리 일대를 주요 공략지점으로 삼고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지난 17일 풍암호수 사거리에서 인사를 통해 '힘있는 후보'를 내세우며 전날 광주를 방문한 김무성 대표의 "최고위원 임명" 발언 등 여당의 지지를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오후에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함께 금호지구 사거리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서구 서창지역 개발을 위한 6000억원 투입 및 기아차 4공장 유치와 연간 100만대 생산 목표 달성 등의 공약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당대표가 또다시 지난 18일 직접 광주를 방문해 운천저수지와 염주사거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조영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지원·박영선 의원도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풍금 사거리에서 집중 지원유세를 펼쳤다. 유세 뒤에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 당원들이 각 지역별로 흩어져 새정치민주연합과 조 후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역시 천호선 당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조승수 정책위 의장, 박원석·정진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강은미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강은미 후보는 이날 오전 풍암저수지와 금강사, 풍암동 상가 등을 방문하고 풍암동 일대에서 천 대표, 노 전 대표와 동반 차량유세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풍금 사거리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유세활동을 하는 등 풍암동 일대를 집중 공략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호남 내 일당 독점주의 타파를 통한 호남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풍암동 중심지와 유동인구가 밀집한 롯데마트 월드컵점, 운천저수지 등을 찾아 세몰이에 나섰다.

천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지역주의 정당을 극복하자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하신 민주당을 깨고 야당을 분열 시켰던 장본인이 1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앞장세우고 또다시 야권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트집에 불과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DJ정신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도 이날 오후 풍암호수공원에서 지역 노동계 인사들과 유세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등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19일에는 KBS광주방송총국에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가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의 지역일꾼론과 정의당 강은미 후보의 강한 야당론,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의 정권심판론,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호남정치 부활론이 맞서 후보간 날선 공방 등이 이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전발연 통합이사장 민간인 선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연구원 이사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통합연구원 이사장을 선임직 이사(민간인) 중에서 뽑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시·도의회 보완 요구 사항'을 시·도의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 의회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때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아 사실상 원장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통합연구원이 발족하면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시·도 집행부, 시·도의회가 동수로 추천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윤현석기자chadol@

檢, 성완종 핵심 측근 주중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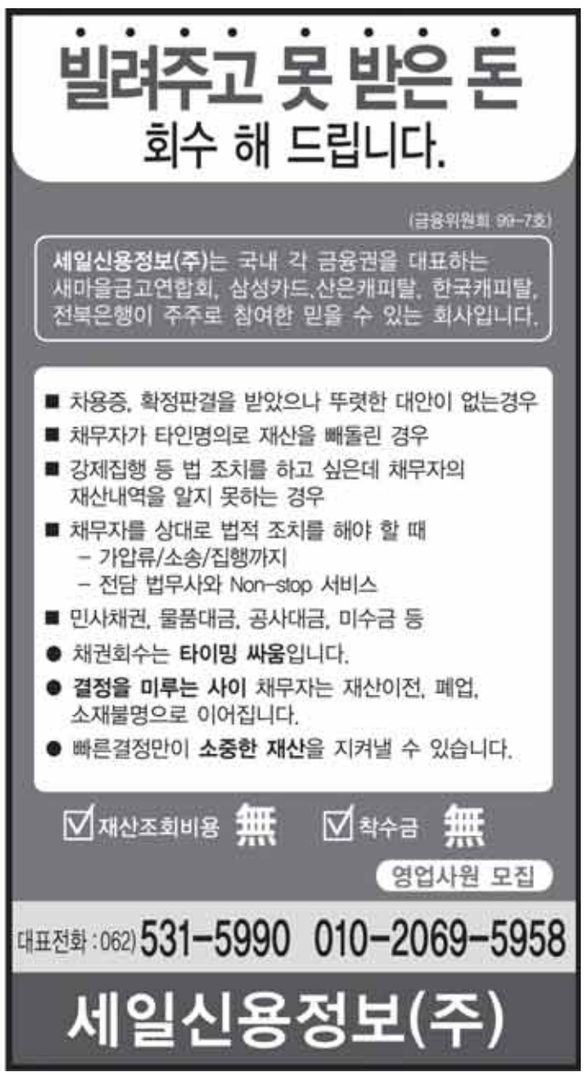
이완구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기업 전현직 임원 6~7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압수물 분석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건 핵심 관계자의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수사팀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시사한 만큼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소환 대상으로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수행비서 이모(43)씨와 회사 홍보업무를 총괄한 박준호(49) 전 상무 등을 포함한 경남기업 전·현직 주요 임직원 6~7명 정도가 거론된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이다. 이달 15일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인물인 셈이다.

경남기업의 재무업무를 총괄해온 한모(50) 부사장과 윤모(52) 전 부사장도 우선 소환 대상이다. 한 부사장은 성 전 회장 사망 전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에 한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남기업 전도금(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 32억원의 용처는 물론 경남기업의 수상한 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2011년 5~6월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을 펼 때 배달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홍 지사가 이번 수사의 첫 타깃이 될 경우 가장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꼽힌다. /연합뉴스